

“코로나 먹는 치료제 도입 앞당겨라”

文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일상회복 2단계 유보 4주 특별 방역
부스터 샷·청소년 접종 속도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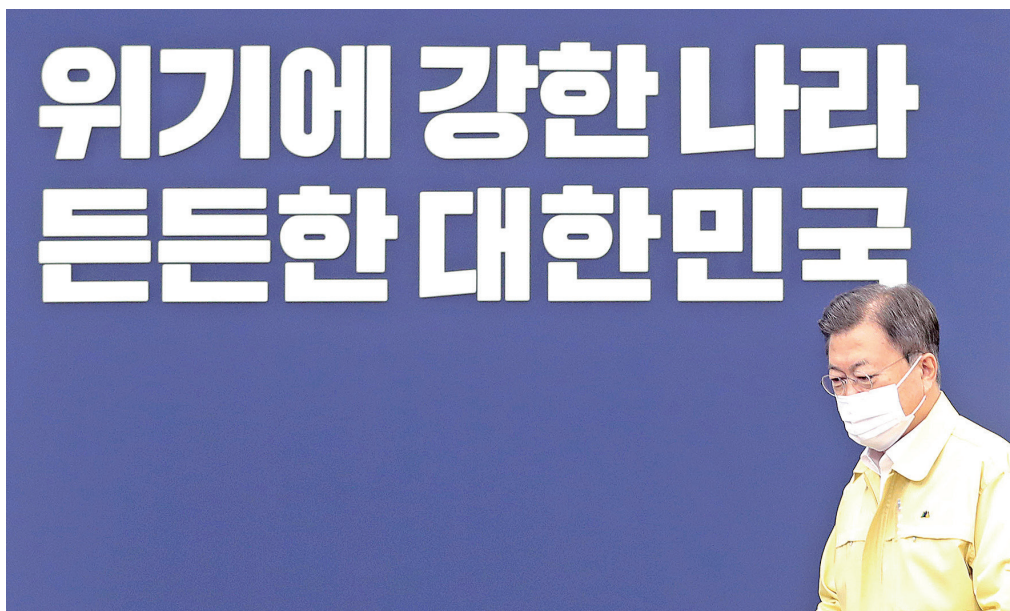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를 도입도 검토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고 특별대책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 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인 접종률이 높은 데 반해 12~17세는 접종이 부진하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 등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국내유입 차단을 위

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역학 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도 2억6천만명에 이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도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고태현 기자



‘오미크론’ 불똥 기준금리 인상 ‘멈칫’

전세계 확산 땀 경기회복 기조 ‘찬물’
미국·한국 등 통화정책 수정 불가피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과 관련, 당분간 신종 변이 바이러스 상황 전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미국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1200억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올해 말 백신접종을 향상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된 만큼, 물가 안정화를 위한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이 실시될 계획이었다.

한은 또한 미국 테이퍼링과 국내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1%까지 높이는 등 점진적인 통화정책 변경이 예상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1만 5491.66으로 전일대비 353.57포인트(2.23%) 떨어졌다.

어졌으며, 29일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등락 끝에 오후 1시 45분 기준 2925.81포인트로 전일 증가(2936.44포인트) 대비 0.36% 하락하는 등 2900선을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 확산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미크론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등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파악을 위한 시간으로 최소 2주를 잡았다.

이와 관련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추가 금리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선거에 따른 향후 거시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오미크론 전파력 특성이 내년 초 금리인상 여부의 핵심으로 설 것”이라 말했다.

이어 “치명률이 높지 않다면 각국도 빗장 잠그기를 계속하긴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특징 파악 및 경제 정책에 대해 관망해야할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한지용 기자

김포시의회, 都公 출자동의안 부결... 사우동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제동’

경기신문 보도 그 후

사업 방식과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우동 김포종합운동장 개발사업에 김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9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부결됐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전체 사업 부지의 93%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방식 전환과 개발 이익금 사

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장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려면 사업 방식 적합성과 사업 목적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과정 공정성, 공공기여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우 의원은 “상업·주거지역 개발이 목적이었지만 공공청사와 주거지 개발로 변경되고 개발이익금도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으로 변경됐다”며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누가 김포시 행정을 신뢰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당초 상업·주거·업무용지 개발 계획이었지만, 주거 50%, 공공용지(청사·공원) 50%로 변경돼 민간이 가져갈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수익금에 상한선을 뒀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사우동 260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6만6711㎡에 대해 총 사업비 6566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용남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와 경제가 함께 큰 세상

LH경기지역본부
수의계약가능 토지 및 아파트 문의
LH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 031-250-8401
주택판매부 031-250-4927
인터넷 LH청약시스템 | <https://apply.lh.or.kr>

경기도를 품어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
어느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LH 경기지역본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경기지역본부